

성장성 특례 상장 기업 현장방문
2018.11.21(수) 10:00

2018.11.21(수)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
- 모 두 발 언 -

2018. 11. 21.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 본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금융투자회사 대표님들,
그리고 자본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문한 기업은 우리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에 있어
여러모로 의미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증권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시킨 첫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은행과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리스크가 큰 창업·성장 단계에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주로 자본시장이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늘 우리가 방문한 기업과 같이
기술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이러한 기대에서 출발하여 자본시장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 혁신의 추진배경

그간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은행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자본시장은 그 역할이 부진했습니다.

* 중기 자금조달비중(% , 17년) : 대출(73.4) 정책(23.4) 자본시장(2.2) 기타(1.0)

은행의 경우 담보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으로 인해 성장성과 미래 가치를 감안한 투자가 어렵고,

벤처캐피탈 역시 기회균등, 사후감사를 특성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벤처투자의 공공부문 비중(%) : 한국(53.9), 미국(12), 유럽(21)

* VC의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억원) : 한국(17), 미국(150), 중국(220)

이에 따라 민간 자금 중심의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다양한 투자자 보호 규제와 사전적 영업행위 제한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상장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방식은 조달금액이 적거나 모집방식에 제약이 커서 기업들이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까다로운 진입요건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경우 직접 발굴·투자한 기업의 IPO 주관이 제한되는 등 이해상충방지 규제 등이 사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개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3.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1일 당정협의를 통하여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혁신·벤처기업이 전문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모험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것입니다.

혁신·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보다 많이,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등의 조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비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BDC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혁신기업 자금공급자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기관 및 고액자산가 중심의 사모펀드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상장·회수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혁신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여 투자자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고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증권회사의 중개 기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금융 특화 증권사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증권사에 적용되는 Positive규제를 Negative로
대폭 전환하는 등 증권회사가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보호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자본시장법 전반에 도입하여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와 중지명령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오늘 말씀드린 12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9개 과제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세부방안 마련과 입법과정에서 업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의미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 5.2% 성장해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는 평균적으로 15년간 1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필요하고 최종 성공률도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매우 중요한 신산업입니다.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13.6%에 달하는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3년간 신약 기술수출은 33건, 계약규모는 10조 4천억원에 달하는 등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동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금년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계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혁신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을 활발하게 발굴·육성하고 상장시키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금융투자회사 대표님들, 그리고 자본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